

이상기후에 '신 보릿고개'...작황 부진에 '한숨 고개'

연말 잦은 비에 파종 늦어지고 봄 한파에 생육 부진 '농민들 울상' 장항 농가들, 대책 촉구 '논 갈아엎기'...영광 찰보리축제도 '파행' 배·멜론·양파 등도 피해...이상기후 대응 전문농법·장비 개발 시급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양파·참두릅·산수유·배꽃 재배 농민들의 피해가 이어진 데다, 보리 생육 환경도 좋지 않아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던 '천수답(天水畷·빗물로만 경작하는 논)' 시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장흥군 농민회는 이날 장흥군 관산을 삼산리 보리밭에서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논에서 키운 보리를 갈아 엎는 집회를 열고 정부와 전남도에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상기후로 인해 맥류와 사료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4950㎡(1500평) 논에 심은 보리를 갈아엎은 농민은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사료작물도 포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농민회와 박형대 의원 등의 주장이다.

박형대 의원(진보·장흥1)은 "지난해 11월 파종해야 할 맥류와 사료작물 종자가 연이은 비로 한 달 가량 늦은 12월에야 파종, 발아율과 성장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올해 2-3월에도 이상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 생육 부진으로 수확량과 소득이 모두 감소할 처지"라고 했다.

최근 찰보리 축제가 열렸던 영광에서도 연이은 비로 토양이 습해 보리를 계획보다 많이 심지 못하면서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광군 군남면에서 열린 찰보리 축제는 지난 10~11일 열렸는데, 당초 보리를 30여ha 땅에 심는 게 목표였지만 계획보다 3분의 1 가량에만 보리를 심게 되면서 규모가 줄었다.

농민들은 여름철 습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면서 가을 파종 시기까지도 토양이 습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축제기간에는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유채 등이 심어져 있던 했지만 정작 이름으로 내세웠던 보리는 많지 않아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흥영 추진위원장은 "작황이 예년에 비해 그리 좋지 않다. 보리는 땅이 말라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가을 파종 시기에 여름철 습한 날씨가 10-11월까지 이어지면서 땅도 제대로 못 갈고 예정보다 보리를 심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이상기후가 계속 이어져 보리가 습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경우 병충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광군 군남면에서 찰보리 농사를 짓고 있는 황기선(68)씨는 "일교차가 크면서 안개도 자주 끼는데 병충해가 오기 좋을 때"라며 "요즘은 사계절 내내 기후가 불안정해 작물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리 뿐 아니라 전남에서는 나주와 구례, 보성지역 배·멜론·두릅·양파 등에서 냉해가 해마다 발생,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전남도내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만 4만 3529ha에 달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법과 장비를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유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3일 장흥군 관산을 삼산리 보리밭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몰고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보리밭을 갈아엎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새 정부 시급한 5·18 과제는 진실규명·왜곡 방지”

5·18기념재단, 국민인식조사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5·18 진실규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5·18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재단은 지난 4월 25일~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무선 전화번호(RDD)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025년 '5·18 국민인식지수'는 72.9

점으로 지난해(72.9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5·18 국민인식지수는 국민들의 5·18에 대한 인식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5·18에 대한 인지도와 기여도에 대한 인식, 5·18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 등을 종합해서 산출되며 숫자가 높을 수록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5·18 진실규명'(32.8%)을 첫 손에 꼽았다.

이외에는 '5·18 왜곡과 폄훼 방지'(20.0%),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19.8%), '5·18 민주유공자의 예우·처우 개선'(19.6%) 등 응답이 이어졌다.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조사해야 할 진실 규명 과

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은폐·왜곡·조작'(33.9%)이 꼽혔으며, '5·18당시 발포 경위와 책임'(24.2%), '5·18 희생자의 암매장 의혹'(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47.3%는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이후, 5·18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40.7%였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4%였으며, 5·18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활동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3.0%로 집계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계엄군 지휘본부 '505보안부대'

5.18 45주년, 여기는 꼭!

시민군·민주 인사 등 고문 수사 서구 쌍촌동에 '원형 그대로'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광주시 서구에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를 짓밟은 신군부 계엄군의 '본거지'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는 계엄군 '505보안부대'가 머물렀던 건물 본관과 식당·이발소, 면회실, 위병소 등 건물이 보존돼 있다.

이곳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인 지휘본부 역할을 했던 곳이자, 수많은 시민군·민주 인사·학생 지도부가 고문당했던 장소다. 계엄군은 광주 곳곳에서 체포한 민주 인사를 505보안부대 지하실에 가두고 혹독한 고문 수사를 했다.

505보안부대는 5·18 이후로도 광주 지역 민주 인사를 사찰하거나 민주화운동을 와해시키고, 민주 인사나 희생자 유가족들을 회유·협박해 묘지를 이전하게 하는 등 공작을 자행하는 등 신군부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이곳 건물들은 지난 2005년 부대가 이전된 이후 방치돼 왔으며, 광주시는 2014년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무상 양여받았다. 광주

시는 505보안부대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본관, 면회실, 위병소 등 건물을 원형 보존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주변에 '5·18 역사공원'도 조성했다.

광주시는 이곳에 1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향후 이 곳을 '국가폭력 기억관(가칭)'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국가폭력의 실상을 알리는 국가폭력 기억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505보안부대 폐건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보이스 2' 공연도 열고 있다.

'콘크리트에 남겨진 소리'를 헤드셋을 통해 듣는다는 콘셉트 하에 505보안부대 내외부를 직접 걸어다니며 이곳에 담긴 스토리를 체험하는 공연이다. 5월까지는 광주민주포럼 등 관련 자들을 중심으로 공연하며, 6월부터는 회당 10여명 내외로 일반인 참가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학 3곳 중 1곳 '소멸위험지역'에 있다

기업 유치하고 대학 지원해야

국내 4년제 대학 3곳 중 1곳이 소멸위험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2024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발간했다.

사총협은 2021년부터 매년 전국 4년제 대학 190개의 학생 및 교직원 수, 재정·시설, 취·창업 현황

등을 분석한 통계 자료집을 발간해왔다. 올해는 '인구 소멸지역과 대학', 'QS 세계대학평가 100위 대학 분석'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소멸고위험)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0%에 해당하는 130곳이었다.

전국 220개 대학 중 소멸위험지역에는 65개교가 있었다. 소멸위험진입지역 58개, 소멸 고위험 지역 7개다. 전체 4년제 대학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가 51개, 국립대가 14개였다.

사총협 신하 중소규모 사립대학 지원 특별위원회 최대해 위원장(대신대 총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멸위험지역에 있는 51개 사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학생 유치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이 낮은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대학의 학생들에게 장학 기간 등록금·국가장학금·기숙사 등의 혜택을 제공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